소용돌이에 휩싸인 휴대폰 시장

중소업체 잇단 부도로 시장재편 불가피 … SK텔레콤 시장진출 놓고 '양론'

휴대폰 단말기 시장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방향성을 상실,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 들어 휴대폰 시장은 중견단말기 업체 부도 및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M&A) 논의 부상→구조조정 과정에서 중국업체 복병 등장→첨단 휴대폰 기술 유출 논쟁→SK텔레콤과 삼성전자간 주도권 싸움→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단말기 시장으로 전이 문제(겸업문제)→정보통신부 겸업금지 법 개정 검토→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과의 형평성 논란→제2차 SK텔레콤과 삼성전자 주도권 경쟁 전망 등으로 지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글 / 백용대 디지털타임스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무려 26.2% 늘어난 252억6,000만달러 예상. 4년간 연평균 16.5%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 2008년엔 429억달러로 전망했으며 올 휴대폰 수출은 지난해보다 33.7% 늘어난 165억8,000만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KISDI는 휴대폰이 향후 4년간 연평균 27.6%의 고성장을 거듭해 2008년에는 419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9년께 휴대폰이 반도체를 밀어내고 수출 1위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위기에 봉착한 국내 중소 단말기 업계

올 상반기 삼성전자 매출에서 휴대폰(9조2,200억원)이 차지한 비중은 32%며 반도체 매출은 8조7,000억원(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초부터 휴대폰에 역전)을 기록했다. LG전자 역시 휴대폰 사업부문 매출이 전체의 35%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올 휴대폰 판매 목표는 8,600만대(지난해보다 51% 증가)로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2년 9.8%, 2003년 10.8%에서 올해는 14%로 치솟을 전망이다. LG전자와 팬택계열은 각각 4,300만대와 2,000만대의 휴대폰을 팔아 세계 4위와 6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은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제품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휴대폰 수출액은 134억달러로 반도체 200억달러, 자동차 190억달러에 이어 단일 품목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판매한 휴대폰은 1억1,000만대로 세계 총 생산량 5억1,000만대의 22%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휴대폰 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 7월26일 중견휴대폰 제조업체중 하나인 텔슨전자가 화의신청을 하면서 국내 중소 단말기 업계의 위기가 고조됐다. 지난해 스탠더드텔레콤과 이론테크의 부도에 이어 올 들어 모닷텔의 부도 및 세원텔레콤의 법정관리, 여기에 국내 5위의 텔슨전자까지 무너지자 업계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국내 휴대폰 시장은 2001년 이후 중국의 CDMA 시장 진출을 목표로 100여개 벤처회사들이 설립되고 또한 2002년 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급부상했으나 불과 2~3년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이는 해외 단말기 시장 경쟁에서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중국시장의 경쟁환경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 들어 노키아가 단말기 가격을 크게 인하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 파워와 다양한 제품 라인업, 적기개발 및 출시능력, 일정 수준의 생산물량 확보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이 도태되는 추세라는 거다.

국내의 경우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등 소위 빅3의 시장 점유율이 매년 늘어나면서 2003년 86.8%(매출액 기준)를 차지, 중소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특히 SK텔레콤이 단말기 시장 진출을 목표로 그동안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 생산을 추진하던 세원텔레콤과 텔슨전자의 OEM 물량을 중단함에 따라 중견 휴대폰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됐다. 더구나 세계 최대 시장이자 수출 전략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에서 중국 단말기업체들이 급성장하는 한편 중국 정부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 국내 단말기 업체들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중소 단말기 업체 위기에 따른 영향

이처럼 휴대폰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금융권이 단말기 산업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지원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졌고 정통부의 지원정책도 속수무책이었다.

정통부는 6월말 단말기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책반(이통협의체)을 긴급 구성해 시중은행에서의 신규 L/C 개설, 대출관행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했으나 정통부 의도와는 달리 금융권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정통부도 어쩔 수 없이 7월말 개입 불가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돼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퇴를 맞게 됐다.

중소 휴대폰 업체의 몰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술 및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가장 먼저 제기됐다. 국내 중소 단말기 업체들은 세계적인 GSM 및 GPRS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해외시장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어 단말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중국, 대만 등 해외업체들의 요구에 적합하다. 화의를 신청한 텔슨전자의 경우 중국업체가 지분참여와 M&A를 포함한 전략적 제휴 요청을 하고 있으며 맥슨텔레콤도 2~3개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생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벨웨이브도 중국 단말기업체와 홍콩 등 투자전문 업체가 인수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 단말기 업체들이 대안 없이 소멸되거나 외국기업, 특히 IT 분야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대만에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IMF 이후 많은 우수인력들이 대기업을 떠나 벤처로 이동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R&D노하우 디자인 설계 능력 등 뛰어난 기술 인프라를 확보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한 기술력을 해외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 단말기업체는 물론 빅3 업체에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고용창출 내수경기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내수 진작 및 수출확대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원동력중의 하나였으며 IMF 이후 대기업의 고용이 정체되는 사이 이들 중소 단말기 업체들이 인력을 흡수해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중소 휴대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통부의 딜레마

기술유출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것인가. 정통부가 국내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진 부분이다.

정통부는 텔슨전자, 세원텔레콤 등 중견 휴대폰업체들이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되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M&A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통부는 국내 중견 단말기업체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국업체란 점에 난망해 하고 있다. 중국업체의 국내기업 인수를 막을 방도가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인데 중국업체가 한국 휴대폰 업체를 인수할 경우 한국의 앞선 휴대폰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중견 휴대폰업체 인수를 통해 휴대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SK텔레콤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SK텔레콤의 휴대폰 시장 진출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국내 휴대폰 시장의 구조조정 역할을 맡길 경우 중국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통신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서비스와 단말기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이룰 경우 시장 지배력으로 전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술유출과 시장 지배력 전이로 인한 단말기 시장 독점화에 대한 우려감속에서 고민만 깊어졌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겸업금지 강화 및 자회사 판매 물량 제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을 변경해 SK텔레텍의 단말기 생산 물량을 제한 ▲공정위 정책건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금지규정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정통부가 SK텔레콤의 SK텔레텍을 통한 단말기 겸업을 금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연관된 분야에서 자회사를 통해 일정 부분 이상의 사업 확대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안이 현실화할 경우 유무선 모두 지배적 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 단말기를 비롯한 제조업으로의 확대 진출을 금지하는

▲ 팬택계열이 출시예정인 국내최초 원형 3D게임폰 'PH-S3500'. 키패드가 돌출돼 양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4개의 방향키로 내장된 4개의 3D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강화된 그래픽 엔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제조업체는 통신서비스 사업진출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업체만 어떤 형태든 제조업 진출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의 논란도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주주(동일인)의 지분 제한 ▲통신사업자 허가 결격 사유 2가지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장비사업자의 겸업을 금지해왔지만 지난 95년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사업자가 전기통신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통신기기 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을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통부가 이를 고쳐 지배적 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한 통신기기 제조업(단말기) 확대를 금할 경우, 통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다. 또 이 경우 유선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에도 유선과 무선의 고유 영역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 지도 아직은 확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통부의 고민이 가을밤처럼 깊어 가는 이유다.

SK텔레콤이 제안하는 대안

SK텔레콤은 국내 단말기 업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단말기 업체간 구조조정을 활성화해 시장 자체적으로 부실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어렵고 금융권도 카드 부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신규 자금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타 산업군에서 신규로 휴대폰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중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에 대해 인수여력이 있는 국내 단말기 업체에 의한 구조조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최근 SK텔레텍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 업체 M&A를 단말기 업체 구조조정 측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텍은 자금여력을 고려할 때 국내 중소업체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이며 이런 연유로 위기상황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M&A의사를 타진했다.

SK텔레텍 입장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단말기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현재 규모에서 안주할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다.

2004년 상반기 내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2.4%, LG전자가 22.2%, 팬택이 13.7%, KTFT가 8.0%, SK텔레텍이 5.8%를 기록했다.

특히 SK텔레텍이 SK텔레콤이라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어 단말기 시장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시각이다.

경쟁제한 우려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겸업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나 이미 96년 LG의 PCS사업권 획득을 계기로 서비스-제조업 겸업을 법 · 제도적으로 허용한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SK텔레텍이 인수하려는 업체는 수출 전문업체이자 주로 GSM기술을 가지고 GSM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어 국내 경쟁과는 무관하며 국내시장은 빅3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단말기 시장에 지배력이 전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SK텔레텍은 98년 설립이래 지금까지 겸업에 따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어 서비스-제조업 겸업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들끼리 과당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내업체 해외매각으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수출시장에서의 부작용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역발상도 제기했다.

현재 중소 단말기 업체들이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중저가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가 해외 메이저업체들이 단가를 크게 낮춘 것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따라서 SK텔레텍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내 중소 단말기업체의 해외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국내시장에서 확보한 브랜드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 고가 브랜드 제품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내수시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해법에 대한 이의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업에 진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말기 시장 불공정 경쟁과 이로 인한 자회사의 수요독점이 우려된다는 거다.

게다가 제조업체가 사업자에 종속된 국내 여건에서는 영업과 관련된 비밀사항(가격, 개발로드맵 등)을 상당부분 사업자에게 알려줄 수 밖에 없고, 사업자는 수직 계열화된 회사에 이러한 정보를 넘길 개연성이 크다며 경쟁사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자회사(SK텔레텍)의 수출경쟁력 하락시 손실을 내수시장에서 만회하는 우회적 지원으로 내수시장이 붕괴되면 이는 또 한번의 휴대폰 시장 구조조정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1차 단말기 구조조정은 SK텔레콤이 해결한다고 해도 SK텔레콤의 단말기사업 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2차 구조조정은 누가 맡을 것이냐는 질책이다.

SK텔레콤이 단말기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경우 전체적인 단말

▲ LG전자가 출시할 3세대 단말기(모델명: LG-U8110)로 동화상 통화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기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K텔레콤이 수출중심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수출경쟁력은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다.

SK텔레텍이 진행한 단말기 수출지역은 중국과 이스라엘 등 극히 한정된 국가로 제한돼 있는 등 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GSM 시장에서 글로벌 휴대폰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는 국내시장에서도 SK텔레텍이 그동안 SK텔레콤에게만 제품을 공급하면서 제대로 된 마케팅과 영업을 해보지 못했다는 점도 내포돼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휴대폰 시장이 오픈마켓(Open Market)이라고 보기에는 유통구조가 사업자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사업자와 수직계열화된 회사에 유리한 혜택을 줄 여지가 크다는 점도 우려감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휴대폰 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해

휴대폰산업이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M&A를 통해 휴대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 사업자의 인수보다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단말기 제조업을 인수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고 정부는 건전한 M&A를 위한 세제혜택, M&A 세금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M&A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휴대폰 업체가 중국이나 대만으로 M&A되는 상황이 차단돼야 해외기술 유출도 방지할 수 있으며 국내 휴대폰업체의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휴대폰 시장에 새로운 피스 메이커를 등장시켜 위기를 오히려 '제2의 붐' 조성으로 이어 나가자는 계산이다.

정통부가 국내 중견 이통단말기 업체의 부도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M&A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 합병절차 간소화 등 법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에 우선적으로 건의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국업체의 급성장과 국내업체간 과열경쟁으로 국내 중견 단말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중견 이통단말기 업체는 미국, 브릭스, 유럽으로 시장다변화와 필요시 업체간 M&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해외 IT지원센터를 통한 주요지역의 시장정보 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M&A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겸업금지 조항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 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91년 8월 신설돼 95년 1월 1차 개정, 96년 12월 2차 개정됐다(당시는 체신부장관을 정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수준). 하지만 97년 12월 들어오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신설됐으며 99년 12월에서 단말기사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개정작업을 거쳤고 2001년 6월에는 통신기기제조업까지 확대됐다. 99년 단말기제조업에 포함된 것은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 LG전자가 LG텔레콤을 통해 통신사업을 시작하려는 시기로 결과적으로 PCS 비리사건이 터졌다.

즉, 당시 겸업금지 조항이 해제된 것은 PCS 비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위치 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LG텔레콤의 경우 LG전자가 있어 법 개정작업이 이뤄지면 LG전자가 투자한 LG텔레콤의 지분철수가 불가피해 통신시장 전체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비해 시장에서 열세를 기록하는 이유는 겸업이라는 이유로 서비스사업자들이 LG전자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가 더 커 이번 조치로 LG전자는 국내 장비 및 단말기 대형 업체로 육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시장 3자 구도의 3위를 지키고 있는 LG그룹의 통신사업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의 기회가 돼 통신시장도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이점도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망 개방 대책에 대한 수립 촉구의 견도 경청할 만하다. 이동통신 유통망은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유통구조 형태를 띠고 있어 제조업체나 유통전문업체들이 발붙일 틈이 없는 상황이다. 유통구조를 제조업이나 유통전문업체에 돌려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유통산업의 중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